

전례 없는 뉴스룸 압수수색 시도

윤석열 식 MBC 탄압 시작됐다



MBC 뉴스룸 진입 시도...1시간 30분 대치

지난달 30일 오전 9시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소속 경찰 5명이 뉴스룸 경제팀 소속 기자의 집에 들이닥쳤다. 경찰이 내민 압수수색 영장은 해당 기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지난해 4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개인 정보가 담긴 인사청문 관련 자료를 타사 기자에게 유출했다는 것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기자의 신체, 의복, 소지품은 물론 주거지와 차량도 포함됐다. 경찰은 기자의 업무용 휴대전화와 업무용 노트북 등을 현장에서 압수했고, 배우자와 자녀의 노트북, 각종 문건 등 집안 곳곳을 샅샅이 뒤졌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경찰은 11시 15분쯤 기자의 업무 공간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며 상암MBC 뉴스룸 진입을 시도했다. 온갖 취재 정보가 모여 있는 언론사의 뉴스룸을 공권력이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더욱이 기자 한 명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수사하겠다고 언론사의 뉴스룸을 뒤진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사 방식이었다.

조합원들은 ‘돌아가십시오! 부당한 방송장악입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경찰의 뉴스룸 진입 시도에 강하게 항의했다. 경찰과 마주 선 이호찬 본부장은 “이 사안이 MBC 뉴스룸을 압수수색할 정도의 사건인가. 이 정도 사안으로 언론사를 압수수색한 사례가 있느냐”고 물었다. 또, “정권 실세인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사건이 아니라면, 혐의자가 MBC 소속 기자가 아니었다면, 과연 뉴스룸 압수수색에 나섰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담당 수사관은 “전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영장대로 법 집행을 하는 것”이라며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10원짜리 사건이나 1억짜리 사건이나 처리 방식은 똑같다”고 주장했다.

뉴스룸에 어떻게든 진입하려는 경찰과 이에 항의하는 조합원들의 대치는 1시간 30분가량 이어졌다. 이후 사측과 경찰이 압수수색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고, 오후 1시 40분쯤 수사관 2명이 해당 기자의 업무 공간을 확인하는 선에서 상황은 정리됐다. 결국 뉴스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집행되지 않았고, 경찰은 뉴스룸에 ‘압수할 물품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갔다.



명백한 과잉·보복 수사...“MBC 장악 본격화”

조합은 MBC 뉴스룸에 대한 이번 압수수색 시도를 명백한 과잉수사로 규정한다. 사안의 경중을 따져볼 때 경찰의 대응 수위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검찰과 경찰이 언제부터 개인 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 이렇게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는가. 국회, 검찰 등 여러 국가 기관에서 공유되고,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정보를 접하는 사람들과 소속 기관은 모두 압수수색의 대상인가. 심지어 경찰은 해당 기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두 달 치 차량 출입 기록과 한 달 치 CCTV 영상 자료까지 요청해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대부분의 물품을 압수했음에도, 압수수색의 실효성이 전혀 없는 뉴스룸 진입을 경찰이 끝까지 고집했다. 이는 수사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정권에 밍보인 MBC에 대한 공개적인 압박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여기에 해당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욕설 파문 보도로 각종 고발에 시달렸던 점을 감안하면, 정권 차원의 보복 수사란 의심도 거둘 수 없다.

MBC 뉴스룸에 대한 전례 없는 압수수색 시도는 MBC 장악 시나리오의 신호탄이다. 앞으로 MBC를 향한 윤석열 정권의 공세는 더욱 다양한 방면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고, 그 정도 역시 더 거세질 것이다. 검찰, 경찰, 감사원 등 이른바 권력기관이 총동원돼 본격적인 MBC 탄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MBC 구성원들은 이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언론의 자유를 짓밟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거부할 것이며, 법의 탈을 쓰고 자행되는 탄압에 더욱더 단호하고 결연히 맞설 것이다.



5월 30일 압수수색 상황

- 09:00 경찰, 뉴스룸 기자 자택/차량/소지품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 고지
- 09:35 변호사 현장 도착해 압수수색 영장 검토 후 집행 시작
- 09:40 경찰, 기자 스마트폰 압수
- 09:45 경찰, 기자 차량 압수수색
- 09:50 경찰, 기자 자택 압수수색...업무용 노트북 취재원 명함과 연락처 등 문서 압수. 배우자 및 아이 교육용 노트북, 각종 USB 파일, 문서 수색
- 11:15 경찰, MBC 뉴스룸 압수수색 시도...조합원들과 대치
- 12:40 회사측, 경찰과 압수수색 관련 논의
- 13:30 수사관 2명, 뉴스룸 경제팀 해당 기자 업무 공간 확인...압수할 물품이 없다는 것 확인한 뒤 철수

“엄중한 시기, 구성원 사기 저하 막아야”



지난달 25일 올해 첫 노사협의회가 열렸다. 조합 15기 집행부와 안형준 사장 등 새 경영진이 처음 마주한 노사협이었다. 조합은 사전에 구성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안건을 취합했고, 이에 대해 사측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MBC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구성원들의 사기를 꺾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측은 올해 경영 지표가 크게 악화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성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에는 공감의 뜻을 밝혔다.



**“직급승진
신규채용
중단
없어야”**

조합은 이번 정기 직급 승진(6월 1일 자 실시)에 부장·국장 직급이 제외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비용절감 효과가 크지 않음에도 직원 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승진을 경영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실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고, 조속한 승진 시행을 사측에 촉구했다. 반면 사측은 직급 승진 제외가 예산의 문제는 아니라고 인정하면서도, 고직급 증가 자체가 부담이고, 업무 비효율 문제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합은 “보직자 ‘직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직급’이 올라가는 것”이며, 고직급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업무 비효율 우려가 커진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부장·국장 직급자가 회사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는 것은 사측의 역할이란 점을 강조했다. 조합의 강력한 요구에 경영진은 부장·국장 직급 승진 실시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합은 신입사원 채용도 중단 없이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신입사원 채용은 회사의 미래가 걸린 중장기적 비전속에서 판단할 사안이며, 한 해 경영악화를 이유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신입 채용은 당연히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규모와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사측은 구체적인 경영 상황도 설명했다. 경영진은 올해 4월까지 누적 실적이 수익 2,155억, 영업 손익 -159억이라고 밝혔다. 전년과 대비해 수익은 402억, 영업 손익은 545억 줄어든 수치다. 회사는 하반기 광고 실적 회복도 불확실하고, OTT 투자 축소로 하반기 실적 반등도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사측은 드라마 편성 이연 등을 통해 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 상태로라면 연 500억 규모의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스포츠국
조직개편
냉정한
평가 필요”**

조합은 3년 전 단행된 스포츠국 조직개편(본사 제작 업무 폐지 및 MBC 플러스 이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했다. 조합은 “기획과 제작을 분리해 기획에 집중하자는 애초 취지와 반대로 제작 업무에 치여 기획을 못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회사의 목표와 반대로 프로그램 경쟁력이 오히려 더 떨어졌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9월에 열릴 항저우 아시안게임 준비도 순탄치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조직개편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조직개편의 당위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스포츠PD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들은 인정했다. 사측은 MBC플러스의 인력 부족 문제로 스포츠PD 파견이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며 “외주 인력 충원,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인력 운용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반기에 기획국을 중심으로 스포츠국 조직개편에 대한 종합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반직 전환 확대 등
전문직 처우
개선해야”

조합은 전문직의 일반직 전환비율 확대와 처우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기존의 노사합의는 ‘2년마다 전환 대상자의 4% 이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도록 돼 있는데, 전환율이 사실상 4%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반직 전환 비율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조합은 또 일반직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전문직 승호 기준일을 일반직과 동일하게 연 2회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일반직은 5월, 11월 두 번 승호를 실시하는데, 전문직은 9월에 한 번 승호를 실시하고 있다. 이 경우, 10월에 입사한 전문직은 2년을 기다려야 첫 승호가 가능하다. 조합은 또 계약직에서 전문직으로의 임용 시, 일반직과 같이 군 경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전문직의 일반직 전환 비율은 노사 합의에 따라 충실히 이행해 왔다”고 밝혔고, 승호 기준일 확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며 소급 문제 등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03년 수준인
직원 복지
확대해야”

직원 복지에 대한 논의도 깊이 있게 진행됐다. 조합은 현재의 직원 복지가 점점 후퇴해 총액 기준 20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직원 복지 총액은 60억여 원으로 2003년 63억 원과 유사하며, 100억 원가량이던 2011년과 비교하면 40%나 낮은 수준이다. 조합은 경영 실적이 안 좋을 때마다 축소됐던 복지가 이후 실적이 좋을 때도 다시 늘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 구성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문화카드 한도 상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합은 “근로복지기금에서 집행되는 복지에산은 경영실적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사측도 구성원 사기 진작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조속한 노사 합의로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사측은 “인원에 따라서 복지 총액이 달라질 수 있어 총액으로만 따질 수는 없다”면서도 복지기금협의를 통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합은 조만간 회사와 근로복지기금 협의를 진행해 구성원들의 복지 확대를 추진하려 한다.

“제작 근무 환경
꼼꼼히
살펴야”

프로그램 제작 근무 환경 개선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조합은 최근 몇몇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휴식 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장시간 연속 근무가 진행되는 등 제작환경이 여전히 열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긴축 경영 분위기나 제작비 압박 등으로 인해 이 같은 제작환경이 묵인될 수 있어 회사가 적극적인 의지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열악했던 드라마 제작환경이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 이후 상당 부분 개선됐던 점을 예로 들며, 예능과 시사교양 프로그램 제작에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회사는 조합의 지적에 대해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사내 내부 협의를 시작하겠다”며 개선 의지를 강하게 밝혔고, 제작 가이드라인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안형준 사장 정책발표

비전을 넘어 구체적 성과로 증명해야

‘글로벌이 열광하는 IP 허브’

지난달 24일 본사 골든마우스홀에서 진행된 정책발표회에서 안형준 사장이 내세운 비전이다. 콘텐츠의 지적재산권 및 판매권리 등을 뜻하는 IP를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강한 의지라는 설명이다. 안 사장은 “어떤 IP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기업의 영향력과 가치가 평가되는 시대인 만큼 IP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부 환경이 불확실하지만, 삼진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 풀스윙을 하지 못하면 절대로 담장을 넘기는 홈런을 칠 수 없다”며 “콘텐츠와 IP에 대한 투자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하에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IP 허브’ 위한 4가지 핵심 과제는...

‘IP 허브’라는 비전을 위해 안 사장은 4가지 핵심 과제를 밝혔다. 첫 번째는 ‘콘텐츠 생산기지 MBC’. 드라마를 콘텐츠 생산의 핵심으로 꼽은 안 사장은 “드라마 본부는 내부 조직 개편을 통해 자체적으로 기획한 드라마의 IP 개발에 주력할 것”이라며, 투자 유치와 함께 MBC 아카데미를 활용한 작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초 방영 예정인 ‘수사반장 1963’을 필두로 ‘연인’과 ‘열녀박씨 계약결혼녀’ 등의 드라마를 기대작으로 꼽았고, 예능 부문에선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시즌 2·3’와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등이 신규 킬러 콘텐츠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음으로 제시한 핵심 과제는 ‘외부 파트너십’. 안 사장은 이를 자신의 최우선 추진 과제라고 소개했다. 중동과 인도, 남미 등 신흥 시장을 공략해 콘텐츠 수익을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거대 자본도 적극 유치해 MBC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사장은 “전담 TF를 설치해 직접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발로 뛰겠다”며 “올 하반기 안에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본사와 지역사의 관계를 ‘네트워크 연합’ 대신 교양과 예능, 드라마는 물론 뉴스 역량까지 결합한 ‘콘텐츠 연합’으로 재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핵심 과제로는 가짜 뉴스에 대응하는 ‘진짜 뉴스’로 공영방송의 역할에 충실하고, 다양한 관점의 인센티브 제도 등을 도입해 ‘일하는 조직’ MBC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로드맵의 부재...성과가 중요

안 사장이 밝힌 정책들은 MBC 구성원이라면 대부분 공감할만한 것일 수 있다. 그럼에도 아쉬웠던 건 로드맵의 부재이다. MBC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그 과제들을 언제, 어떻게 이루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못했다. MBC를 둘러싼 대내외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더욱 명확한 계획을 바탕으로 구성원의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었다.



또한 올해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냉철한 원인과 진단, 해결방안 등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여러 구성원들의 현장 질의에 명확히 답변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지점이다.

안 사장이 MBC 사장에 취임한 지도 벌써 석 달이 지났다. 급변하는 환경을 감안하면 남은 시간이 그리 넉넉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이다. 안 사장은 올해 경영 환경이 크게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MBC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정권의 MBC 장악 시도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공영방송 MBC의 독립을 지켜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이제 정책 발표를 통해 제시한 비전을 보다 구체화하고, 놓쳤던 부분에 대한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방향이 잡혔다면, 이제는 성과로 증명해야 할 때다.

‘법 기술자’의 막무가내식 ‘방송 장악’



결국 예정된 각본 그대로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혁신처 청문이란 요식 행위만을 거친 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했다. 면직 처분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법성 논란도 끝내 외면했다. 방송 장악에 혈안이 된 폭주 기관차의 모습 그 자체였다.

‘법치’마저 내던진 윤석열 정권의 폭주

윤석열 정권은 취임 직후부터 한 위원장 사퇴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다. 대놓고 한 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했고, 대면 업무보고도 거부했다. 검찰과 감사원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방통위를 1년 내내 탈탈 털었다.

감사원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을 제기하자, 검찰이 전면적인 수사를 벌였고,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3월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기각 사유까지 적시하며 영장을 기각했지만, 검찰은 한 위원장을 기어이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한 위원장을 면직 처분했다. 대통령실이 내놓은 설명 자료는 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갖다 붙인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한 위원장 면직은 위헌적·위법적 요소가 다분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위해 방통위원의 신분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방통위원장은 국회 의결을 통해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 방통위원의 결격 사유는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정무직 공무원인 방통위원장에게 국가공무원법상 면직 규정을 억지로 끌어와 한 위원장의 면직을 강행했다. 틈만 나면 ‘법치’를 내세우는 윤석열 정권이지만, 그들에게 법은 ‘방송 장악’이란 그릇된 욕망을 위해 자의적으로 꺾 맞춰 이용하는 도구인 듯하다.

내년 총선 앞두고 MBC 장악 마무리?

임기를 불과 두 달 남겨둔 한 위원장을 이처럼 무리하게 면직한 것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영방송 장악을 서둘러 마무리하겠다는 목적으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방통위원장 교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해임, MBC 사장 교체 등에 걸리는 물리적 시간을 고려할 때 한시라도 빨리 장악 시나리오를 가동해야 한다는 판단일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MBC 장악 움직임은 보다 전면적으로,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를 두 달 넘게 임명하지 않고 있어서, 새 방통위원장이 취임하면 방통위 상임위원은 정부·여당 추천 인사 3인, 야당 추천 인사 1인 구도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방통위를 장악한 다음에는 방문진에 대한 검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법적 근거도 없이 방문진에 대한 국민감사를 강행하고 있는 감사원과 동시 압박에 나서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어떻게든 방문진 이사회 구조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려 할 것이 자명하다. 시중에는 여론의 MBC 장악 시간표와 시나리오가 공공연히 유포되고 있다. 그러나, 시나리오는 시나리오일 뿐이다. 현 정권의 막무가내식 방송 장악 시나리오는 결국 이 정권의 ‘독배’가 될 것이다.



설마... 진짜 이동관? ‘방송 장악’ 전과, 학폭 문제 없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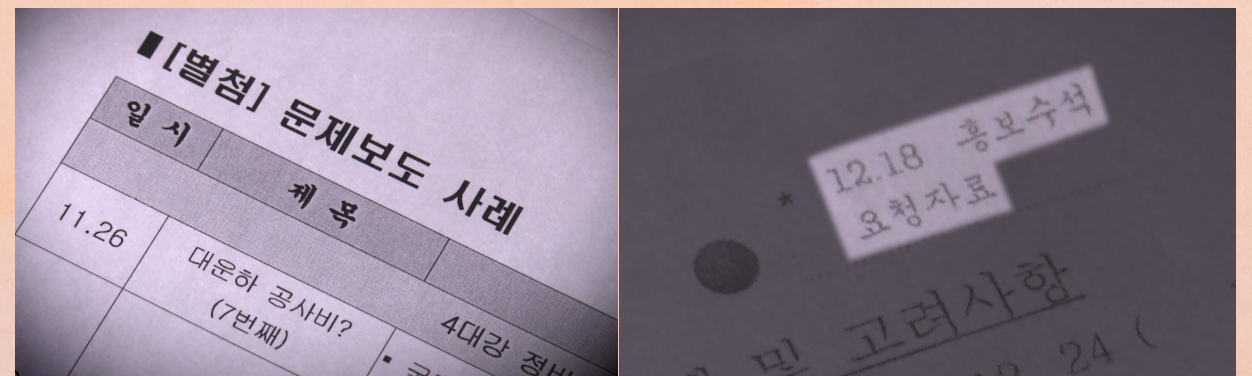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 방통위원장으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지목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내정은 진작 해냈고, 인사청문회 준비도 이미 착수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대통령실은 한상혁 위원장을 면직하며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중립성을 저버렸다”는 사유를 들었다. 그런데 고작 내세운 인물이 이동관이라니, 말 그대로 기가 찰 노릇이다.

이동관이 누구인가. 이명박 정권 당시 ‘방통대군’으로 불리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공영방송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 아니던가. MB정부 초대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비서관에 이어 청와대 언론특별보좌관까지, 3년 5개월 동안 언론을 쥐락펴락하면서, MBC를 암흑기로 몰아넣었던 장본인이다. 이동관이 대변인 때는 부대변인을, 홍보수석비서관 때는 후임 대변인을 맡아 찰떡 호흡을 과시한 인물이 김은혜 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다. 이동관을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내세우겠다는 것은, 두 사람이 MB정부 때 그러했던 것처럼, MBC를 다시 굴복시키겠다는 노골적인 신호로 볼 수밖에 없다.

이동관은 자신의 ‘언론 장악’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내부 문건은 그의 주장과 전혀 다른 진실을 보여줬다. 지난 2008년 12월 12일, 이동관이 대변인으로 있었던 청와대 대변인실은 ‘MBC 뉴스데스크 보도 분석’이란 다섯 장짜리 문건을 생산했다. 이전 2주간 보도된 내용 가운데, ‘문제보도’ 20편을 분류한 문건이었다. ‘문제보도’라고 규정한 이유는 4대강 문제 지적, 정부의 경제 정책 비판, 앵커의 비판적 클로징멘트 등 정권의 입맛대로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국정원이 만든 문서에서도 이동관의 개입 흔적이 남아 있다. 2009년 12월 24일에 작성된 ‘라디오 시사프로 편파 방송 실태 및 고려사항’이란 제목의 문건. MBC 등 지상파 라디오 방송에서 좌파 프로그램, 좌편향 직원, 출연자를 분류하고, 이들을 퇴출시킬 방안을 정리한 내용이었다. 이 문건은 누군가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작성돼 있는데, 자료 요청자는 다름 아닌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다.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바로 이동관이다.



윤 대통령이 이런 이동관의 ‘전과’를 높이 사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한다면, 이는 언론 자유의 종말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 심지어 이동관의 아들이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보다 강도가 훨씬 높은 학교 폭력 사건의 가해자이고, 이동관 측의 무마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관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견잡을 수 없는 국민적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